

생산과 복지의 상호연계의 정치 : 이론적 논의와 스웨덴 사례의 분석

안재홍*

1. 서론: 문제제기

비교정치경제학은 생산레짐(production regime)과 복지국가를 별개의 주제로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시장을 억제하는, 즉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주체로 개념화하고 사회정책 또한 사회계급간 분배정치의 결과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단의 학자들은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사이에 제도적 보완성이 체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Kitschelt et al 1999a; Huber and Stephens 2001; Ebbinghaus and Manow 2001). 사실, 1980년대에 이미 사회정책과 생산레짐간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비교정치경제학이 시장을 사회 및 정치 체제에 “맞물려서”(embedded) 성장한 “정치·사회적 구조물”로 개념화하고 “생산의 사회적 체제”(social systems of production)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Piore and Sabel 1984; Granovetter 1985; Hollingsworth and Boyer ed. 1997). 그 결과, 사회정책도 생산에 연계된 사회적 체제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생산레짐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에스핑 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은 1990년 저작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미의 자본주의가 복지국가의 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패턴으로 발전했음을 이론화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을 위시한 사회정책이 복지국가의 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고용구조를 유발시킨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Esping-Andersen 1990, 6장).

생산레짐과 복지레짐의 통합적 접근을 더욱 가속시킨 것은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이론이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테제는, 세계화가 시장 중심적 체제로 전환하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도록 압박하고 있음에도 각국의 정치경제제도는 ‘조정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라는 조직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간에 제도적 다양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Soskice 1999).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노사관계, 기술훈련, 기업통치 구조, 기업간 관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조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들 제도로 구성된 생산레짐이 나라마다 다르게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Hall and Soskice eds. 2001; Huber and Stephens 2001).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생산을 생산시장 외곽의 정치 및 사회 제도와 연계하여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레짐과 복지체제를 잇는 메커니즘을 이론화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작업에 착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사이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에 대한 연구는 주제의 시의 적절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론과 방법론 모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은 첫째,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가 제도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내재된 문제점을 이론과 방법론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하나의 분석 틀을 제시한다. 생산레짐론과 복지국가론은 생산과 수요라는 경제의 상반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레짐과 사회정책간의 인과관계를 서로 다르게 제시한다. 이 글은 이론적으로는 ‘이념’(ideas)과 ‘이익’(interests)의 정치라는 개념변수를 도입하고, 방법론적으로는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생산레짐과 사회정책간의 인과적 관계가 역사경로에 따라 어떻게 형성·변화되어왔는지를 규명한다. 둘째, 이러한 이론과 방법론적 관점에서 스웨덴 사례를 분석한다. 스웨덴 사례의 분석에서는 생산레짐의 사례로 노사관계를 잡고, 노사관계가 이념과 이익의 정치의 영향하에서 스웨덴 복지국가를 특징지었던 렌모델(Rehn model)의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렌모델의 심화가 이를 가능하게 한 노사관계에 어떠한 변화의 압박을 주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스웨덴모델의 해체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이론과 방법론적 논의와 사례분석의 결과를 비교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한다.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생산과 복지의 상호연계 문제에 접근한 이글의 논의는 세계화 이후 전개되고 있는 복지국가 재편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상호연계의 정치: 이론과 방법론적 논의

1)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복지국가론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생산의 사회적 체계와 생산레짐의 개념에 근거한다. 생산의 사회적 체계란 생산을 둘러싼 일련의 제도, 조직, 사회적 가치들이 응집되어 이룬 “하나의 복합적 사회형태”를 일컫는다(Hollingsworth and Boyer 1997, 2). 생산의 사회적 체계는 1980년대에

케인즈주의의 수요 자극 중심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치자 부상된 개념이다. 이 개념에 내재된 이론적 함의는 경제의 '공급측면'(supply-side), 즉 생산의 체계는 정치 및 사회 제도에, 더 나아가 문화에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으로 경제 성과 및 생산패턴의 국가간 차이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Streeck 1992, 2-3; Hollingsworth and Boyer 1997, 19-20; Piore and Sabel 1984).

생산레짐은 생산의 사회적 체계 개념과 이론적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전략적, 미시적 측면을 강조한다. 생산레짐이란 기업, 소비자, 피고용자, 자본가 등 자본주의 체제의 '미시적 조직들이 자신들이 맞물려 있는 제도들이 부과하는 인센티브와 억제라는 게임의 규칙 안에서 어떻게 상호관계를 형성하는가를 개념화한 것이다(Soskice 1999, 101-2). 특히, 기업이 생산과 연계된 외곽의 제도들--노사관계, 기술교육 및 교육, 기업통치, 기업간 관계, 종업원 관계 등--에서 어떻게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다룬다(Hall and Soskice 2001, 6-7). 생산레짐에 따라서 조정이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 LME)와, 시장 외적 제도들--국가, 노사관계, 더 나아가서 비공식적 제도들--이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조정된 시장경제'(CME)로 나뉜다. CME는 다시 조정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따라서 전국적 조정시장경제와 부문별 조정시장경제로 구분된다(Kitschelt et al 1999b; Huber and Stephens 2001). 생산레짐의 개념을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연계하면, 자본주의 정치경제는 생산레짐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며, 세계화 시대에도 이러한 조정양식의 다양성은 크게 약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Hall and Soskice 2001).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이론적 틀을 기업이 생산 외곽 제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의 조정을 수행하는가를 중심으로 짜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논의의 초점은 기업과 사회정책간의 관계에 맞춘다. 친 노동계급 정당의 역할 및 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강조하는 기존 복지국가 이론들과 비교하면,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기업 및 사용자연합과 사회정책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여러 연구를 관통하는 주장은 사용자(연합)들이 기존의 인식과 달리 사회정책의 발전에 주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역으로 사회정책은 기업의 활동,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높은 보상률을 지급하는 실업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고급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유인·보유하도록 이끈다. 대략, LME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CME는 보수주의 또는 시민주의 복지국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Hall and Soskice 2001, 50-1; Huber and Stephens 2001, 4장; Kitschelt et al. 1999b). 노사관계 및 사회정책 형성에서 사용자(연합)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초계급연합"(cross-class coalition) 이론과 이론적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Swenson 2001; Swenson 1991).

자본주의 다양성론이 사회정책을 경제의 공급측면에서 그리고 생산과 연계된 정치 및 사회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는 반면, 복지국가론은 사회정책을 경제의 수요측면에서 접

근하며 일차적인 설명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주의는 복지국가 정치경제의 이론적 틀을 제시했으며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수요측면과 연계하여 강조했다. 즉 수요 자극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했으며 사회정책을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복지국가론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의 성장 원인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았으며, 최근들어서는 세계화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재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¹⁾ 복지국가 연구의 추세를 정리해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 복지국가 연구는 복지국가의 형성 및 발전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화의 논리”(the logic of industrialism) 및 근대화론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통적 가족의 해체, 인구의 노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에 따르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과정에서 성장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 연구는 행위자들의 “정치적 조직화” 이론과 “제도 또는 국가 중심적” 이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전자는 노동 중심적 시각에서 노동이 국가 및 자본과 어떠한 제도적 관계를 구축했는가, 또한 친 노동 정당이 어느 정도 국가 또는 의회를 장악했는가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권력자원론, 특히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이 대표적인 이론이다.²⁾ 후자는 사회정책의 채택 및 발전은 국가 조직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관료제와 재정적 역량이 강하며, 제도의 네트워크에서 “거부점”(veto-point)이 많지 않는 정치제도들과 국가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제기한다(Amenta 2003; Bradley et al. 2003; Huber and Stephens 2001, 제2장; Huber, Ragin, and Stephens 1993; Pierson 1991, 제1장; Pierson 2001; Shalev 1983).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은 1990년 저작에서 사회정책을 생산레짐과 연계시킴으로써 복지국가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에스핑-앤더슨은 사회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행위를 시장과 가족이라는 제도의 역할과 연계시켜 분석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복지국가의 형태를 탈상품화와 계층화(stratification)의 정도에 따라서 자유복지국가, 코포라티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0; Esping-Andersen 1999 참조). 이러한 분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구미의 자본주의가 복지국가의 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패턴으로 발전했음을 이론화한 것이다. 에스핑-앤더슨은 더 나아가 사회정책이 노동시장과 같이 생산과 연계된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이론적 질문을 던지며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 국가가 실업보험,

- 1) 세계화가 복지국가 재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동향을 잘 정리하는 문헌으로는 Swank 2002, 2장 참조.
- 2) 노동 중심적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간계급을 위시하여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회계급의 다양성을 강조한 연구로는 Baldwin 1990 참조.

조기은퇴, 장애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회정책을 통해서 실업자들을 노동시장 밖에서 관리한 경우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노동시장 안에서 관리한 경우는 노동인구의 직업 참여율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요컨대, 에스핑-앤더슨은 “사회정책이 노동의 공급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노동시장정책이 노동공급 구조의 변화, 즉 실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에서 멈추었다. 즉 이러한 노동공급 구조의 변화가 역으로 노동시장정책을 가능하게 했던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까지 이론적 질문을 확대시키지는 않았다(Esping-Andersen 1990, 150; 안재홍 2002).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복지국가론을 비교하면, 서로 반대의 관점에 서서 상대를 설명하기 때문에 두 이론 사이에는 이론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경제의 공급측면, 즉 생산에 이론의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정치 및 사회 제도들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에 따라서 생산의 패턴 및 성과를,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정책을 설명한다. 복지국가론은 사회정책을 경제의 수요측면과 연계하는 한편, 노동계급의 권력자원 및 국가와 정치 제도의 특성 등이 주요 독립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요컨대, 두 이론은 인과관계의 경로를 반대로 잡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인과관계에 시간의 변수를 도입하여 두 이론 사이에 내재된 갈등을 풀고자 한다. 단순히 인식론(epistemology)의 차원에서 인과관계의 적실성 또는 보편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설명대상, 즉 세계의 구성이 변화하며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변화된다는 존재론(ontology)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Hall 2003 참조).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론의 차원에서 시간이 인과관계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설명 방법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횡단면적,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복지국가의 형성·발전·제편의 과정에서 사회정책과 생산레짐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추적할 수 없다. 이 글은 역사경로의존과 서사(敍事)의 방법을 도입하여 시간과 인과관계의 변화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2) 역사경로의존과 서사: 시간과 장소의 동학

역사경로의존(path dependence)의 방법론에 의하면, “초기에 발생한 것(사건)이 이후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Sewell 1996, 262-63; Mahoney 2000, 510). 역사경로의존의 이와 같은 정의에는 두가지 가정이 함축되어 있다. 첫째, 인과관계의 연쇄성(sequence)이다. 초기에 발생한 사건이 일련의 연쇄적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후기에 발생한 사건보다 인과관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초기 사건의 우연성

(contingency)이다. 어느 한 시점에서 여러 가능한 경로 중에서 하나가 형성되고 이것이 그 이전과는 다른 궤적을 따를 때 하나의 역사경로가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이전 경로의 역사적 조건들은 새로운 경로를 설명하지 못한다. 역사적 사건이 ‘역사적 전환점’을 기점으로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변수들간의 “균형”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작용하는 “논리” 까지도 바꾸었기 때문이다(Sewell 1996, 263; Abbot 1992; Griffin 1992).³⁾ 이처럼 이전의 경로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에서 역사적 사건이라는 우연성을 가정하는 것이다(Mahoney 2000; Pierson 2001; Thelen 1999).

역사경로의존의 개념은 두가지 연쇄를 상정한다. 첫째, “자기 강화적 연쇄”(self-reinforcing sequence)이다. 이는 초기의 사건이 시간이 갈수록 인과관계에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이익체증”(increasing returns)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예컨대, 어느 한 기술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고정비용이 이미 투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습효과,” “조정효과,” “적응력이 강한 예상” 등의 추가적 효과로 인하여 이익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Pierson 2000a, 252-4; Pierson 2000b).

둘째, “반작용적 연쇄”(reactive sequence)이다. 이는 하나의 사건이 이전 사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동시에 후속 사건의 원인되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작용적 연쇄는 자기 강화적 연쇄와는 다르다. 자기 강화적 연쇄는 초기 사건이 일련의 사건들과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력이 시간이 흐를수록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나, 연쇄반작용은 초기 사건이 변형되거나, 심지어는 인과관계의 방향을 역행시킬 수 있는 역작용의 과정을 포함한다(Mahoney 2000, 526). 다음 장에서 이 글은 연쇄반작용의 개념에 입각해서 생산레짐과 복지국가의 관계가 형성·변형되는 역사경로를 설정한다. 노동조합운동 및 사민당의 특성이 개입변수로서 작용하여 생산레짐(노사관계)과 복지국가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복지국가의 성장은 역으로 이를 가능하게 했던 노사관계와 개입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논의한다.

역사경로의존에 의한 분석에서 시기구분은 아주 중요하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역사경로의존의 개념에는 인과관계의 시간성(temporality), 우연성, 개연성 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역사경로는 역설적으로 경로의 시작과 끝을 가정하며, 따라서 시기의 구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역사경로는 하나의 인과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시작되기 때문에 시기구분의 기준은 그 인과관계가 “경로 내적 변화”(endogeneity)에 의해서 변화했느냐가 된다. 이 과정을

3) 역사적 전환점 또는 역사적 사건은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변수들간의 관계가 역사경로의 궤도를 이탈하여 다른 궤도에 진입했을 때 발생한다. 이때에 두 시기 사이에는 “통시적 변이”(cross-temporal variation)가 발생하며, 따라서 “통시적 비교”(cross-temporal comparison)가 가능하다(Bartolini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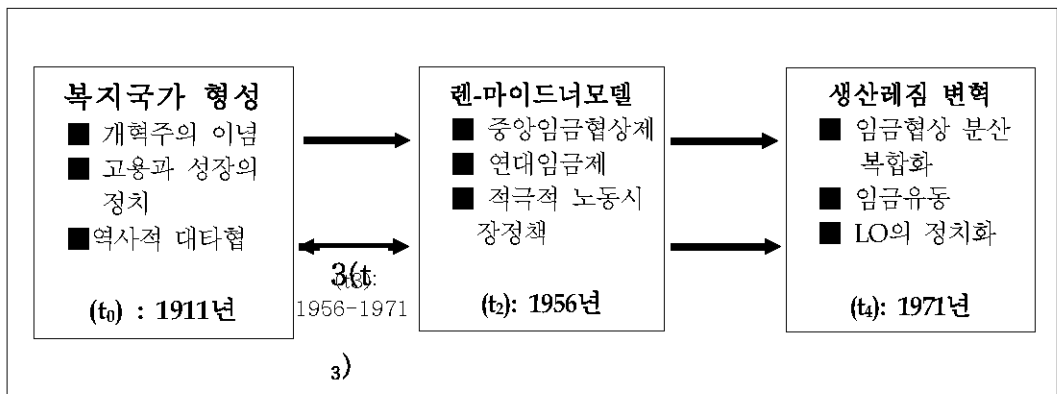
세분해보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에 인과관계가 형성됨으로써 하나의 경로가 형성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에 따르는 반작용적 연쇄의 과정에서 종속변수가 역으로 독립변수(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이 때에 경로 내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며 새로운 역사경로가 시작되거나 역사경로내에서 연쇄적 반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Büthe 2002, 485-88). 이 글은 시간과 경로 내적 변화의 개념을 사용하여 생산레짐, 간접변수, 복지국가 사이의 인과관계의 형성과 변화를 동시에 살펴볼 것이다. 연구시기의 구분에서 이 글은 복지국가의 형성기를 대략 20세기 초에서 1950년대까지로, 그리고 복지국가의 성장이 역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생산레짐 및 간접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시기를 1960-70년대로 잡을 것이다.

인과관계에 시간의 도입은 실증주의의 설명과는 다른 방식의 설명 기제를 필요로 한다. 실증주의가 동시대의 횡단면적 분석을 통하여 인과관계의 보편성을 밝혀내려 한다면, 역사경로의존의 방법은 특수한 사건(들)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밝힌다. 사회과학자들은 비교역사방법과 함께 “서사”(narrative: 敍事)적 설명 방법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McDonald ed. 1996; Mahoney and Rueschemeyer 2003; Skocpol and Somers 1980). 서사란 사회현상을 “시간의 경과에 맞추어, 연쇄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접합과 우연성으로 가득찬 이야기체”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서사는 “시간과 공간에 맞물려 있는 부분들간의 일련의 관계”로 구성된다(Griffin 1992, 405; Somers 1992, 601). 서사를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구성하느냐, 아니면 해석학적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에 얽힌 상황에 내재된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구성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Somers 1998; Kiser and Hechter 1998; Bates et al 1998)

그러나 서사적 설명 방법의 문제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해석학적 접근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방법을 어떻게 배합해야 하는가로 귀결되어야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형성 및 성장 과정은 근대(modernity)로의 이행 과정이기도 하다. 근대로의 이행은 자본주의 시장과 국가가 전근대적 사회로 확산·침투해들어가고, 이에 대한 사회의 지속적인 반작용의 결과, 두 흐름이 연쇄적으로 맞물리면서 전개되었다. 폴라니(Karl Polanyi)의 관점에서 보면, “자율적 조정의 시장”이 전근대적 사회와 맞물리면서 사회가 “거대한 변혁”의 회오리에 휘말려드는 과정이며,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표현을 빌면 “도구적 이성”이 “삶의 세계”를 대체해가는 과정이기도 한다(Polanyi 1944; Habermas 1971). 근대로의 이행은 시장과 국가라는 합리성이 작용하는 공간과 정체성의 정치가 작용하는 해석학적 공간이 서로 ‘맞물리고’ 다시 ‘풀리는’(disembedded)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며, 이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걸맞게 합리적 선택이론과 해석학적 접근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Dallmayr 1987; Ferejohn 1991).

3) 분석모델

이 글은 생산레짐이 정치·사회적 변수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형성되고, 복지국가가 지속되면서 역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생산레짐과 정치·사회적 변수가 변화하는, 즉 작용과 반작용의 연쇄로 구성된 역사경로를 분석한다.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에 분석 시점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다르다. 스웨덴 사례의 분석모델(<그림1> 참조)의 예를 들면, 종속변수는 t_2 의 시점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형성이지만, t_4 의 시점에서 보면 생산레짐의 변화이다.



<그림 1> 노사관계와 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

이 글은 생산레짐에서는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를, 그리고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간의 관계를 논의한다. 노사관계는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금협상제에서 노동과 자본간 이념적 대립, 그리고 코포라티즘의 정치제도까지 다양한 차원을 포괄한다. 노사관계는 경제영역에서의 ‘이익’(interests) 갈등 뿐만이 아니라 정치영역에서의 이념(ideas) 갈등도 내포한다. 이익과 이념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노사관계, 더 나아가서는 정치체제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익과 이념간의 관계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 특성--예를 들면, 기존 제도가 새로운 이념에 친화적인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Hall 1986; Hall 1989). 이 글에서는 이익과 이념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노동시장정책의 형성 그 자체보다는 정치적 변수가 노사관계에 주는 영향과, 노동시장정책이 생산레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익과 이념은 상호적이며 일종의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Interest는 “개

인들간에 존재하는 그 무엇”(inter + est)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모두를 포괄한다(Arendt 1958, 182).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도 지적하듯이, interest는 지식에 대한 관심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런만큼 자기해방적이며 이념을 지향한다(Habermas 1971, 311-15). 그러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이념이 역으로 정치적 행동을 겨냥하는 ‘신념’을 제공함으로써 interest를 주도한다(Geertz 1964, 64). 요컨대, 이익과 이념은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그 방향은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Ahn 1996).

이 글은 자본주의 시장에 의한 전근대 사회 침투와, 이에 대한 사회-정치적 반작용으로 점철된 근대로의 이행기에 발생한 복지국가의 형성에 대한 설명에서는 interest를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당시 노동조합운동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만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사민당과 역동적 관계를 구축했다. 폴라니(Karl Polanyi)가 주장하듯이, 계급을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 시기에 사회구성원들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interest)이 위협받든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의 침투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Polanyi 1944, 154-55).⁴⁾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과 관료제적 국가의 성장으로 합리성의 공간이 사회의 문화 공동체적 공간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한 복지국가 성장기에 대한 설명에서는 interests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interests는 점차 이념과 괴리되었으며 경제적이며 사적인 의미에 의해 지배받게 되었던 것이다(Hirschman 1977, 32-66; Arendt 1958, 38-41; Wolfe 1989). 이 글은 복지국가의 과대 성장의 영향으로 발생한 노동조합 내부간의 갈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념과 이익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에 기초하여 이 글은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이론을 사례연구에 적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이론이다.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스웨덴 복지국가의 형성기는 사민당이 개혁주의(reformism)로 선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사민당은 사회주의 이념을 사회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의회라는 정치공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민당과, 노동자들의 현실 ‘이익’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운동이 역동적이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했다. 이념과 이익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노동계급이 형성되던 시기였던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념이 행위자의 선호 또는 관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제도가 형성되는 다이내믹을 탐구하는 이론이며, 따라서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유효한 분석 방법이다(Blyth 2002; Hall and Taylor 1996; Immergut 1998).

4) 이러한 시각에서 계급형성을 논의한 문헌은 Thompson 1963; Katznelson and Zolberg, eds. 1986 참조

그러나 복지국가의 성장이 역으로 생산레짐, 즉 노사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설명에는 합리적 선택이론이 더 적합하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행위자들의 선호는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제도의 제약하에서 어떻게 전략으로 행동하는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1950년대 초에 LO의 주도하에 노동조합운동은 완전고용의 실현을 위해 중앙임금협상제, 연대임금제,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렌모델을 사민당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렌모델의 성공으로 완전고용이 달성되자, 이를 가능하게 한 노사관계, 즉 연대임금제와 중앙임금협상제는 오히려 노동조합운동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노동조합연맹 각각은 소속 노동조합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에 몰두했으며, 이는 결국 노노갈등, 즉 블루칼라 노조 대 화이트칼라 노조, 그리고 수출산업 노조 대 내수산업 노조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LO는 렌모델에 내재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화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살트셰바덴 협약의 틀을 깨게 된다. 이 글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이용하여 기존 제도와 조직의 이익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변화, 즉 복지국가의 과대 성장으로 발생된 노사관계의 변화를 분석한다(North 1990 1장 및 9장 참조).

3. 스웨덴 사례의 분석

1) 복지국가 형성

1910년대 초의 시점에서 보면, 스웨덴 노동조합운동은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1909년 총파업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LO는 1911년을 기준으로 하면 60 퍼센트 이상의 회원을 잃었다(Hadenius 1976, 27). 1909년 LO 총회는 노동조합운동의 힘을 다시 LO로 집중시키자는 소리만 높았지 아무런 실천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Westerståhl 1945, 67-8). 불쇄비키혁명의 영향으로 좌경화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었던 1917년에서야 LO는 총파업 이전 수준의 회원을 확보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스웨덴사용자연합(SAF)은 총파업 이후에도 노동조합의 정통성을 인정하였으며 단체협약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폐쇄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증오심만 심화시킨다고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총파업 이후에도 단체협상제는 오히려 확장되었다. 1920년의 시점에서 볼 때, LO 회원의 약 5% 만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Åmark 1986, 105). LO와 SAF는 소속 단체들이 단체협상을 통해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총파업 이후부터 1928년에 산업평화회의가 열리기까지 결코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산업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었는가?

(1) 역사경로의 이념적 측면: 개혁주의

19세기 후반부터 스웨덴에 일었던 사회적 갈등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복지국가로 물꼬를 틀게한 역사적 사건은 1911년 제8차 SAP 전당대회이다. 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개혁주의(reformism) 담론이 스웨덴의 노동운동에 뿌리를 내렸다.⁵⁾ 개혁주의는 이후 일련의 사건들과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복지국가 이념으로 발전했다. 제8차 SAP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드러난 개혁주의 담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SAP는 사민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개인들’의 ‘복지’로 잡았다. 스톡홀름 시장 출신이며 스스로 사회주의의 이단자로 자칭하는 린드하겐(Karl Lindhagen)은 전당대회에서 휴머니즘이 “모든 진실한 사회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스웨덴 사민주의의 아버지로 일컫는 브란팅(Hjalmar Branting)도 린드하겐과의 토론에서 휴머니즘에 기초한 견해들이 새롭게 작성되는 당 강령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193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이념과 정책 양면에서 지도자가 될 비그휘르스(Ernst Wigforss)도 1910년에 당 기관지 『시대』(Tiden)에 기고한 글에서 좋은 옷, 근사한 주택, 그리고 가족 자체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필요”이며 사민주의는 “사적 개인들에 대한 사회의 공동책임”을 새로운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SAP 1911, 170-73; Wigforss 1980, 107, 115, 129; 안재홍 1995a).

둘째, 개인들의 복지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이후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이 개혁주의 노선을 이처럼 해석하게 된 배경은 1890년대 초에 시작된 자본주의 “발전”(utveckling)에 대한 논쟁으로 거슬러올라 간다.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발전’된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마르크스의 역사 유물론을 충실히 따르는 한편, 자본주의는 미래에 스스로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운명에 대한 믿음”(ödestro)을 굳게 가졌다. 따라서 스웨덴과 같은 경제적 후진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미래의 과업에 속하나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⁶⁾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더 나아가 ‘발전’의 담론에 기초하여 민중의 “현재적 관심”란 용어를 추론했다. 사회주의 혁명이 미래에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임으로 당은 그 때까지는 노동계급의 “현재적 관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중의 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사회주의 용어 대신 “민중의 현재적 관심 및 의식”에 부합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대중을 선동하기로 결정했다. 1910년대를 전후해서 휴머니즘 또는 복지국가가 공론화될 수 있었던 것도 이것들이 민중의 관심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1911년 제8

5) 사회민주주의 역사에서 개혁주의는 의회 정치권력의 장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 이념을 의미한다. Przeworski 1985 참조.

6) 스웨덴 사민주의의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 대표적 저작으로는 Tingsten 1941a; Tingsten 1941b; Lewin 1970 참조.

차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스웨덴 사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타도를 통한 사회주의의 건설이 아니라 민중의 현재적 관심을 실현하는 과정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으로 그 지향점을 옮겨 잡았던 것이다(안재홍 1995b; Ahn 1996).

스웨덴 노동운동이 소위 혁명전야로 회자되는, 볼셰비키혁명이 발생한 1917년 겨울부터 1918년 겨울까지 대규모 소요를 연쇄적으로 겪었으며, 이 와중에서 개혁주의는 복지국가 이념에 더욱 다가섰다.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하였다는 사실은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에게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SAP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비민주적이라는 이유를 볼셰비키혁명을 들어 단호히 배격하는 한편, 점차 거세지는 소요사태를 보통선거제의 관철, 즉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전환시키는데 주력했다. SAP는 1918년에 결의문을 통해서 볼셰비키식의 비민주적 정권을 거부한다는 것과 민주화가 사회주의 혁명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했다(Tingsten 1941a, 241; Tingsten 1941b, 76-9). LO도 “대규모 스트라이크 또는 혁명으로 민중들은 절대로 더 많은 빵과 단축된 노동시간을 쟁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하고 일부 젊은 사민주의자들의 급진 혁명노선을 경고하고 나섰다(Tingsten 1941b, 72-4; 안재홍 1998, 175-76).

특히 향후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에 주역을 담당할 젊은 사민주의자들이 발상의 전환을 이끌었다. 뮐러(Gustav Möller)는 『시대』에 기고한 글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발전의 결과로 실현되는 것이지 결코 혁명의 방법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볼셰비키혁명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권력관계를 변혁시킬 수는 있겠으나, 보다 향상된 생산방식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새로운 생산방식은 오직 다수의 민중이 경제적 이득을 보는가 라는 기준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민중의 자발적 동의가 아닌, 강제의 방법으로 외세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Möller 1920). 사민주의자들은 1920년 선거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여 보수 및 자유주의 정당들로부터 공격을 받자, 사회화는 생산의 증가와 풍요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Tingsten 1941a, 282-83). 칼레비(Nils Kaleby)는 1926년에 이미 후일 케인즈가 제안하는 방식의 사회화 문제 해결책을 거론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개혁을 통하여 국가가 소유권에 대한 개인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만큼 사회주의는 실천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던 것이다(Karleby 1926, 85; 안재홍 1998, 179-80).

1928년은 스웨덴 복지국가 형성사에서 주요한 해이다. 후일 사민당 정부의 수상이 될 한손(Per Albin Hasson)은 1928년 국회에서 ‘인민의 가정’(folkhem)을 주장함으로써 개혁주의 담론과 복지국가 이념간의 접목을 완성시켰다. 한손에 의하면, 국가는 “인민과 시민의 가정”

이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특권자, 억압받는 자, 특혜 등이 없으며 평등, 단결, 협력, 그리고 우애가 지배”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를 “생존이 보장되고 서로 협력하는 시민들의 좋은 가정”이 되도록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Hansson 1928, 227, 233). 한손의 주장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1930-40년대에 사민주의자들은 그의 주장에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스웨덴 사회에서 folkhem은 곧 복지국가를 의미했다(Berkling 1982, 37; Tingsten 1941a, 307-8). ‘인민의 가정’이라는 담론을 통하여,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사회평등의 신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사회의 갈등세력, 즉 노동과 자본이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공존할 수 있었음을 시사했다(안재홍 1998, 191).

1911년에 개혁주의로 역사경로를 정한 스웨덴 사민주의는 1920년 후반부에는 노동과 자본이 공존하는 방식의 복지국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주의 이념과 민중의 현실적 관심이 복지국가 담론 안에 용해되었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노사관계에서도 1928년은 의미 있는 해이다. 1909년 총파업 이후 최초로 LO와 SAF는 산업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던 것이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형성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이념적 차원에서의 사민주의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과 자본 관계의 변화를 살펴야 할 것이다.

(2) 역사경로의 정치경제학적 측면: 실업과 성장의 정치 그리고 계급타협

1920년 경제공황은 스웨덴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1920년 이후 스웨덴은 고실업 사회로 진입했다. 1920년 경제공황 이전에는 실업률이 제1차 세계 대전과 같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8 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공황 이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실업률은 줄곧 10 퍼센트를 상회했다. 국가는 “국가실업위원회”(Statens Arbetslöhetskommission: AK)를 통해서 대규모 실업정책을 실시했다. 실업정책을 통해서 국가는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했으며, 이는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켰다. 노사관계에 대한 스웨덴 노동운동의 입장은 1911년에 개혁주의 역사경로로 들어선 이래 변화를 거듭하여, 1917-18년에는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삶의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데에로까지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이제 1920년 경제공황 이후 노동운동은 고실업의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즉 경제성장과 산업평화의 제도화를 설정하고 SAF와 협상에 나서게 된다. 요컨대, 발전(utveckling)의 담론에서 시작된 스웨덴 개혁주의 역사경로는 성장(tillväxt)의 담론으로 진로를 틀었던 것이다.

국가의 실업정책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운동을 약화시키고 분열시켰다. 첫째, 국가는 대규모 구제노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한편, 실업구제의 조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국가는 1921-24년에 1,600개가 넘는 곳에 구제노동을 실시하였다. 국가는 구제노동 장소를 중북부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지역적 이동을 도모하였다. 실업자들은 이 곳에서의 삶의 조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가급적 구제노동보다는 현금구제를 선호했다. 국가는 지방 실업위원회로 하여금 실업구제 신청자들에 대한 신상조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구제노동 참여 실업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국가는 실업정책에 일종의 연좌제를 적용하여 노동쟁의를 통제했다. 1921년에 AK는 노동쟁의 참여 노동자 및 쟁의 발생 작업장에 취업을 거부하는 실업자들을 실업구제에서 제외시켰다. 1922년에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일반갈등을 일으킨 경우, 노동쟁의 참여자, 해당 노동조합의 현재 및 과거 조합원, 그리고 쟁의 발생 직종의 모든 노동조합원들까지 실업구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AK 1929, 356-58; Unga 1976, 91-2; Lindeberg 1968, 59-65, 299; SOU 1936: 32, 27-32; 안재홍 1995b). 국가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쟁의를 삼가도록할 정도로 충분히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국가는 구제노동이라는 탈출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조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푸코의 표현을 빌면 “감시”와 “감찰”의 네트워크가 노동자들이 일상적 삶 깊숙이 침투되었던 것이다(Foucault 1979, 170-94).

둘째, SAP와 LO는 구제노동에 대한 AK의 저임금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노노갈등을 악화시켰다. SAP는 AK가 가급적 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함으로써 전체 노동계급의 연대를 유지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LO는 최대한 많은 수의 실업자들을 구제노동에 참여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임금하락경쟁을 방지하고자 했다. SAP와 LO의 이러한 조치는 우선 구제노동과 경쟁관계에 있는, 즉 구제노동 때문에 일자리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노동조합연맹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코문노동자연맹, 도로 및 수로노동자연맹, 비숙력·공장노동자연맹이다. 구제노동 참여 실업자들도 저임금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실업자들은 SAP와 LO가 노동운동의 단결을 위해 자신들을 버렸다고 비판했으며, 1928-9년에는 몇몇 작업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요컨대, 실업의 정치 와중에서 스웨덴 노동조합운동은 세 집단--실업구제 소속 실업자, 구제노동과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그리고 그 외의 노동조합--으로 분열되어 LO와 반목했던 것이다(Lindeberg 1968, 299-302; Unga 1976, 137-41; 안재홍 1995b).

고실업, 국가의 실업정책, 그리고 노노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운동 내부에서는 사용자들에 대한 언술에 중대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운동은 19세기 이래 견지해오던 입장을 바꾸어 생산합리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은 생산합리화를 “소의, 착취, 분열 그리고 빈곤화”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었다(Johansson 1989, 42-7, 393-95). 따라서 1909년 총파업 실패 이후처럼 노동조합운동의 역량

이 약화되었던 때에 생산합리화가 급속히 시행될 수 있었다(Ekdahl 1983, 177-78, 205). 그러나 1921년 LO대표자자회의를 필두로 노동조합운동은 생산합리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바꾸어 국가와 사용자들에게 생산합리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1926년 LO 총회는 생산합리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생산합리화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다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임금조건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LO 의장은 노동쟁의를 통한 임금인상 전략에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LO 1926, 65-8; Johansson 1989, 56; Hadenius 1976, 37; 안재홍 1995b).

노동조합운동은 실업과 임금의 문제를 생산합리화와 경제성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동시에 더 나아가 사용자들과의 공존적 관계의 구축을 모색했다. 노동조합운동의 편집인인 한손(Sigfried Hansson)은 1928년 LO대표자회의에서 노동자들과 사용자들 사이에는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길, 즉 “공동의 이익”이 있음을 강조했다(LO 1928, 21-7). 1928년 12월에 LO와 SAF는 1909년 총파업 이래 처음으로 산업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마주 앉았다. 이 회의는 LO와 SAF 모두가 생산합리화, 생산의 성장, 그리고 산업평화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산업평화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Westesthåll 1945, 189-95; Johansson 1989, 85-6; De Geer 1978, 208-9). 노사관계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시민주의 이념여역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한손이 ‘인민의 집’을 주장하여 노동과 자본이 복지국가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도 바로 1928년이였다.

1920년 경제공황 이후에 노동조합운동 내부에서는 생산합리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연대임금제(solidariska lönepolitik)가 제기되었다. 논쟁의 핵심은 임금협상을 LO로 중앙집중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노동조합간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1922년 LO총회에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1926년 LO 총회, 1931년 LO 총회, 그리고 1936년 LO 총회에까지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수출산업에 소속된 노동조합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내수산업이 임금인상을 가격에 쉽게 전가시킬 수 있는 반면, 수출산업은 경제공황으로 심하게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인해 상품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수출산업 소속 노동조합연맹들은 중앙임금협상제를 통해서 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LO는 연대임금제에 대해서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했다. 임금조건이 양호한 노동조합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LO는 회원간 화합과 단결이 존중되어야 하며, 다수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연대임금제를 반대했다(Westesthåll 1945, 74-6; Swenson 2001, 4장; 안재홍 1995b)

1931년 경제대공황과 1932년 사민당 단독정부의 구성은 노사관계에 있어 또 다른 연쇄적 반작용을 일으켰다. 경제대공황으로 실업률이 20 퍼센트가 넘게 치솟자, 노동조합운동은 생

산합리화를, 사용자들은 고임금 구조를 실업의 원인으로 돌리고 정면 대립으로 일관했다. 사민당 정부는 LO로 하여금 해당 노동조합연맹에 압력을 가하여 노동쟁의를 중지시키도록 종용했다. 사민당은 노동조합운동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오던 방법, 즉 노사관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직접 노사관계를 통제하겠다는 메시지를 LO에게 보냈던 것이다(Hadenius 1976, 46-7; Åmark 1988, 61; Westersthål 1945, 282-382). LO는 SAP 정부, 즉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6년에 LO는 SAF의 제의를 받아들여 사민당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산업평화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LO대표자회의는 LO가 아직 입법의 과정에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SAF와 협력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LO 1936, § 7). 이로써 스웨덴의 노동과 자본은 임금협상을 포함한 모든 노사관계를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시장 주체간 “중양화된 자율”로 규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이는 1938년에 LO와 SAF가 맺은 살트셰바덴 협약에 반영되었다(Kjellberg 1998, 79; 안재홍 2001).

2) 연쇄적 반작용 아니면 새로운 역사경로?: 복지국가의 성장과 노사관계의 변화

개혁주의에서 시작된 스웨덴 노동운동의 역사경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지국가 모델이 완성됨에 따라 마감될 운명을 맞이한다. 그 아이러니의 실마리는 실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치경제의 동학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운동은 실업의 해결을 위해 국가와 자본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 스웨덴 모델로 회자되는 독특한 방식의 복지국가가 건설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연맹들이 완전고용이라는 공공재를 위해서 연대임금제, 임금억제, 소유구조의 왜곡 등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완전고용의 목표가 달성된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연맹들은 한편으론, 소속 노동조합들의 이익, 즉 연대임금제 하에서 임금인상 효과를 노리는 “임금유동”(wage drift)을 생취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론, 소유의 대기업 집중을 전제로 한 렌모델을 비판하고 나섰다. 개혁주의에서 시작된 역사경로가 복지국가 형성으로 이어졌으나, 복지국가의 실현은 이를 가능하게 한 내부 요인들, 즉 독립변수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사민당 정부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렌모델에 기초하여 복지국가를 발전시켰다. 당시 여타 유럽국가도 경제성장을 위한 임금억제, 그리고 이를 사후적으로 사회정책을 통해 보상하는 정치경제제도를 선택했다(Katzenstein 1985, 80). 이들 국가들과 비교하여 스웨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모델은 연대임금제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채택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연대임금제는 LO가 제안한 것으로서 고 임금과 저 임금간의 폭을 중앙임금협상을 통하여 양 방향에서 압축시키자는 것이다. 당연히, 성장산업 부문에서는 임금억제에

의한 과도한 이윤 축적이, 저 임금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는 임금상승에 의한 경영 압박으로 생산합리화의 촉진 또는 대규모의 실업이 예상되었다. 국가는 투자기금제, 기업이 부담하는 일반보충연금제 등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성장산업 부문에 축적된 과대 이윤을 공공저축에 흡수시키고, 이를 자본재 산업부문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자 했다. 저임금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은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성장산업 부문으로 흡수시켰다. 요컨대, 사민당 정부는 완전고용과 산업구조 개편을 동시에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민당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1961-65년에는 GDP의 3 퍼센트를, 1976-80년에는 GDP의 7.2 퍼센트를 지출했다. 그 결과, 스웨덴은 1970년대에도 실업률을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인 2 퍼센트 미만에 서 조율할 수 있었다(Rehn 1988, 56-55, 69-70, 76-91; Pontusson 1992, 64-9; 안재홍 2001, 113-18).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성공은 이를 가능하게 한 노사관계에 변화의 압박을 주었는데, 연대임금제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어 일련의 연쇄적 반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임금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심했으며 생산합리화로 작업여건이 열악해진 산업부문의 노동자들은 1969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전국에 걸쳐 “비공인파업”(wildcat stgrike)을 일으켰다. 이들은 불만을 노동운동 내부에도 돌렸다. 노동운동내의 민주화를 거론하며 중앙임금협상제를 거부하였고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권한이 LO에 집중된 사실을 비판했다(Swenson 1989, 84-95; Kjellberg 1998, 81). 노동운동 내부의 이러한 갈등은 공공부문의 팽창으로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사양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을 전략적 산업으로 이동시키고자 했으나 오히려 공공부문에 흡수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공공부문 종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1950-84년 기간에 342 퍼센트 증가). 공공부문 노조 SACO는 1960년대 후반에 화이트칼라 노조 TCO와 함께 다양한 임금협상 카르텔을 구성하여 LO가 주도하는 임금협상제에서 탈퇴하였다. 그 결과, 임금협상체계가 분산·복합화되었다. 이와 같이 분산·복합화된 임금협상체계는 연대임금제가 낳은 부작용, 즉 임금유동을 위한 노노 갈등과 맞물려 노동계급 내부--블루칼라 노조와 화이트칼라 노조, 사기업 노조와 공공부문 노조--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올슨(Mancur Olsen)의 이론을 따르면, 노동운동 조직의 분산·복합화는 스웨덴 사회에서 그동안 공공재 창출을 가능하게 했던 ‘포괄적 조직’이 와해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Nilsson 1993, 248; Fulcher 1991, 204-5; Olsson 1992, 123; Olson 1982; 안재홍 2001, 129-33; 안재홍 2002, 405).

1960년대 후반부터 LO는 스웨덴 모델이 심화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노사관계의 변화에 정면 대응했다. 첫째, LO는 연대임금제를 더욱 강화하여 블루칼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LO는 1969년 단체협약부터 SAF에게 업종과 노동의 차별을 두지 않는 임금균등화를

요구했으며, 임금유동에서 소외된 소속 노조를 위해 소득보장 조항을 단체협약에 삽입토록 했다. 그러나 LO의 이러한 전략은 공공부문과 화이트칼라 노조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들 또한 임금보장 조항을 단체협약에 삽입하기에 이르렀다. 노노갈등은 점차 심화되어 1983년에 수출산업 중심의 금속노조연맹이 스웨덴엔지니어링협회(VF)와 소위 '초계급연합'을 성사시켜 중앙임금협상제에서 탈퇴하는 사태로 번졌다(Elvander 1988, 35, 45-7; Swenson 1989, 123-76; 안재홍 2002, 406; 안재홍 2001, 134). 둘째, 1970 LO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LO는 시민당과 협력하여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일련의 법--피고용자 기업이사회 참여법(1973), 고용보호법(1974), 교육휴가권법(1975), 노사공동결정법(1976), 노동환경법(1978) 등--을 제정했다. LO는 이들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직업 안정과 단위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도모하였고, 따라서 렌모델이 낳은 부작용을 시정하고자 했다. 특히, LO는 1971년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임노동동자기금법 통과시켜 렌모델의 결과, 발생한 소유의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업 이윤의 20 퍼센트를 신규발생주식 형태로 LO가 운영하는 기금에 적립할 것을 요구하는 임노동자기금안은 사용자들의 조직적이고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신정완 1999, 4-5장; 안재홍 2001, 135-6).

SAF는 1976년 보수당 정권의 등장으로 LO의 공격적 조치에 한동안 반응을 자제했으나, 1980년 대규모 직장폐쇄조치가 실패로 마감되자 노선을 수정했다. 1983년에 SAF는 VF가 중앙임금협상에서 이탈하는 것을 용인했다. 스웨덴 기업들은 1980년부터 7년간 해외직접투자를 5배나 증가시켰으며, 1990년대 전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럽 기업을 인수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SAF는 1938년 살트셰바덴협약 체결 이후 지켜왔던 정치적 중립 노선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다. SAF는 공식적으로 이념과 여론의 형성 및 체제변혁을 위한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천명했던 것이다. 1991년에는 드디어 일방적으로 중앙·지역·지방 정부의 각종 행정기관 및 위원회에서 약 6,000명에 의를 대표를 철수시킴으로써 코포라티즘, 즉 스웨덴 모델 자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Stephens 2001; Pestoff 2001; 안재홍 2001, 141). 이로써 1911년 개혁주의에서 시작된 스웨덴식 복지국가 정치경제체제 구축의 역사적 경로는 마감되었으며 스웨덴의 노동과 자본은 새로운 정치경제모델을 건설해야 할 새로운 역사의 초입에 들어서게 된다.

4. 결론: 이론적 함의

이 글은 이론과 방법론의 차원에 생산레짐과 사회정책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이 글은 역사에로 시각을 돌려서 복지국가가 형성·성장·재편되는 과정에서

생산레짐과 사회정책간에 인과관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를 위해서 인과관계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역사경로의존과 서사의 방법을 논의하였다. 스웨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 글은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형성과 성장 과정을 아래와 같이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다.

첫째, 노동과 자본은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계급타협에 이르렀는가 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의 협력적 관계의 구축은 민주주의 복지국가 형성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 중심적 연구, 즉 권력자원론이 이 분야의 연구를 이끌었으며 세계화 이후 자본 중심적 이론이 세를 얻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권력자원론에 의하면, LO는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하자 노동쟁의보다는 정치참여를 통한 생산 결과의 재분배에로 투쟁의 방향을 선회했다. SAF도 보수당을 지원하기 보다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압력단체로서 투자조건을 보장받는 데에 주력했다. 이러한 '정치적 교환'이 바로 LO와 SAF를 1938년의 '역사적 대타협'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Korpi 1978, 99, 320; Korpi 1983, 165, 172; Bradley et al. 2003). 초계급연합론이 자본 중심적 이론을 대표하고 있으나, 생산의 조정에서 자본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자본주의 다양성론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초계급연합론에 의하면,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는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이익을 초월한 연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계급연합의 대표적인 예로는 1920년대에 수출산업의 노동조합들과 사용자연합들이 산업간 임금격차의 축소를 위해 연합하여 중앙임금협상체를 시도한 것을 들고 있다(Swenson 2001). 그러나 이 글의 시각에서 보면, 노동운동은 이미 1920년 경제공황 이후부터 자본과 협력적 관계를 모색했다. 그 원인은 실업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으로 노동조합운동이 약화되고 분열되었다는 데에 있었다. 사민당 정권이 들어서기 전이 1928년에 이미 스웨덴의 노동과 자본은 산업평화의 제도화에 합의했던 것이다. 요컨대, 사민당의 집권은 이미 시작된 사회협력을 위한 시도를 더욱 촉진시킨, 즉 개입변수로 작용했던 것이다.

둘째, 생산레짐과 사회정책의 분석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세계화 이후 전개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재편 및 노사정 관계의 변화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론은 세계화에 대한 대응이 국가와 노동과 자본간의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변화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에서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다양성론이 전제하고 있는 제도의 역사경로의존성을 벗어나는 사례가 발견되며, 스웨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스웨덴 모델의 해체는 세계화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이전에 스웨덴 모델의 심화가 노사관계 및 노노관계를 협력적 관계에서 대립적 관계로 전환시켰으며, 세계화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스웨덴은 역사경로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경로를 이탈하고 있

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노동운동이 세계화 이전까지 자본에 대해 공격적일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실업률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국가가 산재·실업·장애자 보험 등의 사회정책을 통해서 실업을 노동시장 밖에서 관리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실업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나라들과 스웨덴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첫째,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일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세계화 이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노사정 관계의 변화를 적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안재홍 2002).

마지막으로, 스웨덴 모델의 형성과 와해의 원인을 적확히 짚어낼 수 있다. 노동운동은 연대임금제,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단기적 실업, 그리고 소유의 집중을 용인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완전고용과 보편적 사회정책을 실현하고자 했다. 스웨덴이 이와 같은 독특한 방식의 복지국가 건설로 역사경로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개혁주의에 내재되어 있었다. 이는 근대로의 이행기에 현재의 관심과 미래 지향의 사회주의 이념이 개혁주의 담론 속에 융해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계급이라는 정치·사회적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성장은 근대 부문을 과대 성장시켰으며 이익의 정치화를 가속시켰으며, 노동운동은 이익갈등의 정치에 휘말려들게 되었다. 요컨대, 노동운동에서 이익과 이념을 잇는 긴장관계가 이완된 것이다. 노노갈등의 심화와 초계급연합의 형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모델의 급속한 와해는 LO의 전략적 실수에도 기인한다. 스웨덴 모델의 특이성은, ‘중양화된 자율’의 노사관계 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SAP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LO가 이익단체로서 SAF와의 관계를 정립한 것이다. 물론, SAF는 이에 대한 댓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 LO는 1970년대에 스웨덴식 복지국가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화·계급화의 노선을 선택했다. 연대임금제를 강화시키고자 했으며 노사관계를 입법을 통한 정치적인 방법으로 조율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LO는 근대의 과대 성장으로 이익이 사회갈등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가는 상황에서 계급화를 시도한 것이며, 이는 계급 내부간 갈등을 오히려 조장했고 결국 초계급연합으로 이어졌다. LO의 정치화 노선에 대응하여 SAF는 스웨덴 모델의 해체를 위한 수순을 밟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LO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SAF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경로를 선택하도록 이끈 우연한 사건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 신정완. 1999. 『입노동자기금논쟁을 통해 본 스웨덴 사민주주의의 딜레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재홍. 1995a. "개혁주의에 대한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의 논쟁에 표상된 '민중의 관심' 1886-1911." 『산업노동연구』 제1권 1호.
- _____. 1995b.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노동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29집 3호.
- _____. 1998. "전간기 스웨덴 노동계급의 집단행동과 정치체제 변동." 『국가전략』 제4권 1호.
- _____. 2001.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쇠퇴: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통시적 비교," 『국가전략』, 제7권 1호.
- _____. 2002. "세계화와 노사정 대응의 정치경제: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사례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
- Abbott, Andrew. 1997. "On the Concept of Turning Point," *Comparative Social Research*, Vol. 16: 85-105.
- Ahn, Jae-Hung. 1996. "Ideology and Interests: The Case of Swedish Social Democracy, 1886-1911." *Politics & Society* 24(2): 153-87.
- AK. 1929. *Det svenska samhället och arbetslösheten 1914-1924*. Stockholm: Tiden.
- Amenta, Edwin. 2003. "What We Know about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Comparative and Historical Research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c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endt, Hanna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ldwin, Peter. 1990. *The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tes, Robert H. et al. 1998.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 Rationality, Culture, and Transition." *Politics & Society* 26(4): 603-642.
- Blyth, Mark. 2002. *Great Transform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dley, David et al. 2003.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in Postindustrial Democracies." *World Politics* 55 (2): 193-228.
- Büthe, Tim. 2002. "Taking Temporality Seriously: Modeling History and the Use of Narratives

- as Evid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3), 481-93.
- Dallmayr, Fred. 1987. "Political Inquiry: Beyond Empiricism and Hermeneutics." Terrence Ball, ed. *Idioms of Inquir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De Geer, Hans. 1978. *Rationaliseringsrörelsen i Sverige*. Stockholm: SN&S.
- Ebbinghaus, Bernhard and Philip Manow. eds. 2001. *Comparing Welfare Capitalism*. London: Routledge.
- Ekdahl, Lars. 1983. *Arbete mot kapital*. Lund: Arkiv.
- Elvander, Nils. 1988. *Den svenska modellen*. Stockholm: Tiden.
- Esping-Anderson, Gö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 _____.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erejohn, John. 1991. "Rationality and Interpretation: Parliamentary Elections in Early Stuart England." Kristin Monroe, ed., *The Economic Approach to Politics*. New York: HarperCollins.
- Foucault, Michel. 1979. *Discipline and Punish*. New York: Vintage Books.
- Fulcher, James. 1991. *Labour Movements, Employers and the State*. Oxford: Clarendon.
- Geertz, Clifford. 1964. "Ideology as a Cultural System." Davi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The Free Press.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3), 481-51.
- Griffin, Larry J. 1992. "Temporality, Events, and Explanation in Historical Sociology. An Introduction,"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Vol. 20, No. 4.
- Habermas, Jürgen. 1971. *Knowledge and Interests*. Boston: Beacon Press.
- Hadenius, Axel. 1976. *Facklig organisationsutveckling*. Stockholm: Rabén & Sjörgren.
- Hansson, Per Albin. 1982. "Folkhemmet, medborgarhemmet." Anna Lisa Berkling, ed. *Från Fram till folkhemmet*. Falköping: Metodica Press.
- Hall, Peter A. 1986.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9. "Conclusion: The Politics of Keynesian Ideas." Hall ed., *The Political Power of Economic Idea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Aligning Ontology and Methodology in Comparative Politics,"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chemeyer, eds.
- _____ and Rosemary C. R. Taylor. 1996.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XLIV: 936-57.
- _____. and David Soskice, 2001.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Hall an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rschman, Albert O. 1977.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llingsworth, Rogers J. and Robert Boyer, eds. 1997. *Contemporary Capit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ber, Evelyne and John D. Stephens. 2001.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Huber, Evelyne, Charles Ragin, and John D. Stephens. 1993. "Social Democracy, Christian Democracy, Constitutional Structure, and the Welfare 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3): 711-49.
- Immergut, Ellen M. 1998. "The Theoretical Cor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Politics & Society* 26(1): 5-34.
- Johansson, Anders L. 1989. *Tillväxt och klassarbete-- en studie av den svenska modellens uppkomst*. Stockholm: Tiden.
- Kjellberg, Anders. 1998. "Sweden: Restoring the Model?" Anthony Ferner and Richard Hyman, eds.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Oxford: Blackwell.
- Lindeberg, Sven-Ola. 1968. *Nödhjälp och samhällsneutralitet*. Lund: Uniskol.
- Karleby, Nils. 1926. *Socialism inför verkligheten*, Stockholm: Tiden.
- Katzenstein, Peter. 1985. *Small States and World Market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iser, Edgar and Michael Hechter. 1998. "The Debate on Historical Sociology: Rational Choice Theory and Its Critic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3), 785-816.
- Kitschelt, Herbert et al. 1999a.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9b.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Advanced Capitalist Democracies." In Kitschelt et al. 1999a.
- Korpi, Walter. 1978. *The Working Class in Welfare Capital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_____.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Lewin, Leif. 1970. *Planhushållningsdebatten*. Stockholm: Almqvist.
- LO. 1926. *Protokoll fördd vid landsorganisationens i Sverige. Nionde ordinarie kongress I* Stockholm den 29 aug.-5 sept. 1926. Stockholm: Arbetarnes Tryckeri.

- _____. 1928. Protokoll, fört vid Landsorganisationens Representantskaps extra sammanträde den 5 och 6 November 1928, å Landsorganisationens lokal i Stockholm. LO Arkiv.
- _____. 1936. Protokoll, fört vid Landssekreteriatets sammanträde den 13 januari 1936. LO Arkiv.
- Mahoney, James. 2000.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Theory and Society* 29: 507-48.
- Mahoney, James and Dietrich Rueschemeyer, eds. 2003.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Donald, Terrence J. ed. 1996. *The Historic Turn in the Human Scienc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 Möller, Gustav 1920. "Revolution och socialism," *Tiden*.
- Nilsson, Christian. 1993. "The Swedish Model: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Contracts," J. Jartog and J. Theeuwes, eds. *Labour Market Contracts and Institutions. a Cross-National Comparison*. Amsterdam: North-Holland.
- North, Douglass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son, Mancur.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Olsson, Anders S. 1992. *The Swedish Wage Negotiation System*. Vermont: Dartmouth.
- Pestoff, Victor. 2001. "Globalization, Business Interest Associations and Swedish Exceptionalism in the 21st Century?" mimeo.
- Pierson, Christopher. 1991. *Beyond the Welfare State?*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Pierson, Paul. 2000a.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251-67.
- _____. 2000b. "Not Just What, but When: Timing and Sequence in Political Processes." *Studie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14 (Spring), 72-92.
- _____. 2001. "Coping with Permanent Austerity: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Affluent Democracies," Pierson ed.,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iore, Michael J. and Charles F. Sabel.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New York: Basic Books.
- Polanyi, Karl.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

- Pontusson, Jonas. 1992. *The Limits of Social Democra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1985. "Social Democracy as a Historical Phenomenon." Przeworski,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hn, Gösta. 1988. *Full sysselsättning utan inflation*. Stockholm: Tiden.
- SAP. 1911. *Förhandlingarna vid 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s åttonde ordinarie kongress i Stockholm den 9-16 April 1911*. Stockholm: Arbetarnes Tryckeri.
- Sewell Jr., William H. 1996. "Three Temporalities: Toward an Eventful Sociology." Terrence J. McDonald, ed., *The Historic Turn in the Human Scienc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 Shalev, Michael. 1983. "The Social Democratic Models and Beyond: Two Generations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Welfare State." *Comparative Social Research* 6: 315-51.
- Skocpol, Theda and Margaret Somers. 1980. "The Uses of Comparative History in Macrosocial Inquir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2: 174-97.
- Somers, Margaret R. 1998. "We're No Angels: Realism, Rational Choice, and Rationality in Social Sci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3): 722-84.
- _____. 1992. "Narrativity, Narrative Identity, and Social Action: Rethinking English Working-Class Formation." *Social Science History* 16(4): 591-630.
- Soskice, David. 1999. "Divergent Production Regimes: Coordinated and Uncoordinated Market Economies in the 1980s and 1990s." In Kitschelt et al. 1999.
- SOU 1936: 32. *Svensk arbetslöshetspolitik åren 1914-1935*. Stockholm: Norstedt & Söner.
- Stephens, John D. 2001. "Is Swedish Corporatism Dead." mimeo.
- Streeck, Wolfgang. 1992. *Soci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Studies of Industrial Relations in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London: Sage.
- Swank, Duane. 2002. *Global Capital,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in Developed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enson, Peter A. 1989. *Fair Shares*. London: Adamantine Press.
- _____. 1991. "Bringing Capital Back In, or Social Democracy Reconsidered." *World Politics* 43, 513-44.
- _____. 2002. *Capitalists against Marke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helen, Kathleen. 1999.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 369-404.
- Tingsten, Herbert. 1941a. *Den svenska socialdemokratins utveckling I*. Stockholm: Tiden.

- _____. 1941b. Den svenska socialdemokratins utveckling II. Stockholm: Tiden.
- Unga, Nils. 1976. Socialdemokratin och arbetslöshetsfrågan 1912-34. Lund: Arkiv.
- Westerståhl, Jörgen. 1945. Svensk fackföreningsrörelse. Stockholm: Tiden.
- Wigforss, Ernst. 1980. Skrifter i urval I. Stockholm: Tiden.
- Wolfe, Alan. 1989. Whose Keep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Åmark, Klas. 1986. Facklig makt och fackligt medlemskamp. Lund.